



'기름값 걱정 없는 농장,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농촌' 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 농촌 에너지 자립, 농업 에너지 전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 기여 등 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산·학·연 전문가 참여 1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8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농업분야 역시 AI·그린 전환(AI/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활용하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하여 방안 마련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TF 1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가속화하고, 소득 증대로 연계 시키기 위한 방안 집중 모색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확산과 함께, 햇빛소득마을·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 태양광 보급 등 농촌 공간의 에너지 자립방안을 재생에너지지구 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한다. 회의에 참석한 성우농장 이도현 대표는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법령 등의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내 에너지 구조의 저비용·고효율 전환 기반 마련 검토

농업 에너지 전환반은 노후화되고 내연기관 중심인 농기계의 수소·전동화 전환과 시설원예·축사 등에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지원 확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축장 등의 가공시설에 자가 태양광 보급을 통한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에너지 전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농기계 분야 전문가인 충남대 김용주 교수는 “전기·수소 활용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별 특화 기종 등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동시에 출력, 작업시간, 충전여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대규모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여 방안 마련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 농지, 가축분뇨·영농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상생 모델 마련에 집중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재생에너지 생산 업무를 추진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종구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의 설정,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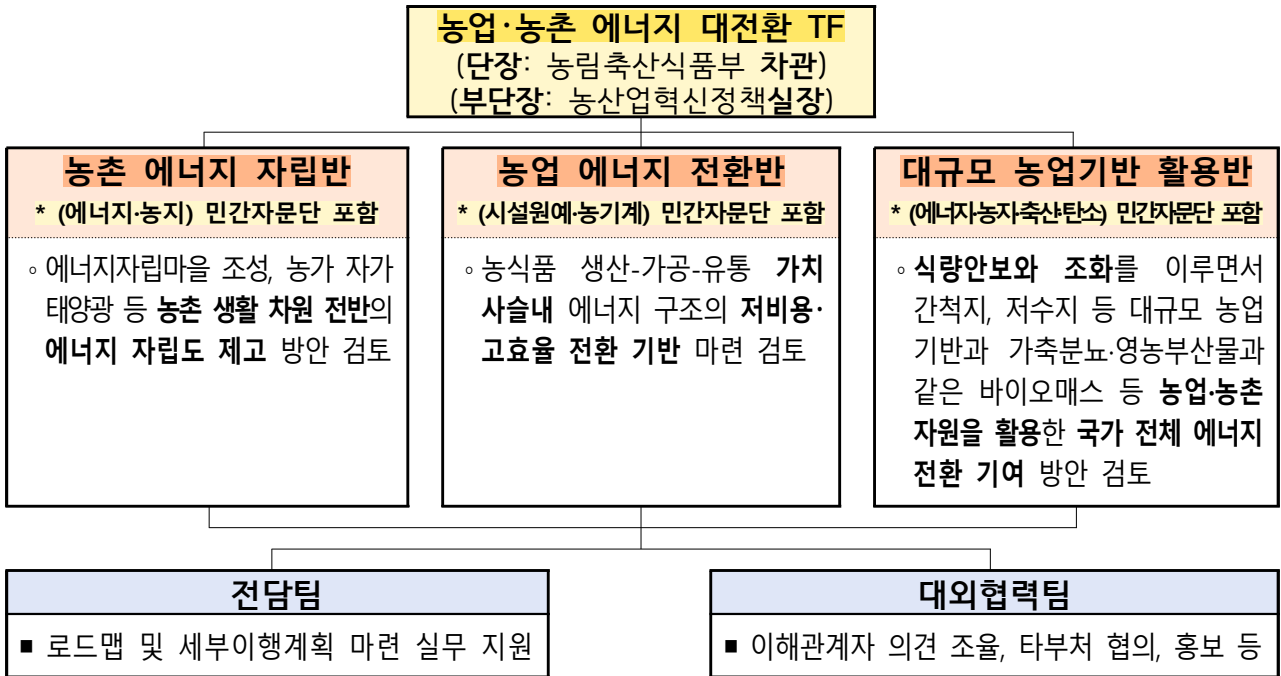
붙임.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운영 방안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책임자	과 장	김신재 (044-201-2891)
		담당자	사무관	홍근훈 (044-201-2894)

☞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 및 성과 지표 설정, 관련 제도기반 정비 및 범부처 협업 방향 마련

- ▣ (추진 배경) 중동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 부각, AX/GX 전환, 스마트팜 등으로 농업분야 에너지 전환 필요성 증가
 - 농업·농촌은 농업기반, 바이오 자원 등 에너지 전환에 활용가능한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립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역할 가능
- ▣ (구성) 농식품부 차관 단장, 혁신실장 부단장,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실무 총괄
 - * 과제 발굴·자문 지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운영

◀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구성안 ▶



- ▣ (운영) 7월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및 이행과제 마련, K-GX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이행 완료까지 지속 이행·점검
 - * (운영 기간) '26. 4. 27. ~ 7. 30. (3개월)
 - * (운영 방식) 전략수립(~'26.7월)시 까지 각 반별 실무 작업 → 단장 주재 격주 추진 상황 점검, 필요시 수시 개최